

금남로에서



김 주 정

한 의사가 개업했다. 그는 어떤 급사병 이든 자신 있다고 자랑했다. 활처럼 휘었 든 새우처럼 굽었든 치료법은 간편하고 비용도 싸며 한 번이면 곧바로 낫는다고 떠들었다. 등이 굽어 바로 재면 키가 여섯 자이고, 굽은 대로 재면 여덟 자인 사람이 돈을 싸들고 왔다. 의사는 그를 엮어 놓고 등에 올라가 마구 밟았다. 비명기 터져나 왔다. "뱀아 죽일 셈이오?" "굽은 등만 펴 주러면서!"

'신 정부'의 부활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을 보면서 떠올린 옛 중국의 우화(寓話)다. '지방을 살려 달라'니가 정부가 내놓은 것이 '광역경제권 개발'이다. 전국을 7개 경제권으로 나눠 글로벌 경쟁에 나설 수 있게 국교를 지원해 도로, 항만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성장동력이 될 신기술 개발도 돕겠다는 최신식 '치료법'이다.

처음엔 "길이 보인다"라고 반길 정도로 지방의 반응이 그럴 듯했다. 도중에 수도

권 규제완화를 위한 논거일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선(先) 지역균형개발,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부 선언에 한 가닥 기대는 남겨졌다. 그러나 지난달 '5+2 광역경제권' 개발을 이룰 30대 선도

굽은 등만 펴주면 된다고요?

산업이 발표된 이후 사정은 달라졌다. 광주시는 지난 10일이 기한인 선도산업 계획서 제출을 거부했다. 전남도는 서남해안관광 레저도시 조성사업이 빠진 것에 불이 났고,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만 달랑 선정된 것이 불만이다. 충청권은 충청 내륙개발이 배제됐다고 화가 났다. 상대적으로 혜택 좀 보게 됐다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강원권 등도 조만간 풀이질 수도권 규제 때문에 전전긍긍이다. 병 고치기는커녕 죽게 될지 몰라 펴고 있다면 '진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좁아

터진 국토에서 개발의 기준을 인구조로 잡은 것부터 엉터리였다. CEO 출신 대통령의 정부가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경제 3요소를 유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쯤은 잘 알 터인데 '인구'(노동)만을 기준으로 권역을 나누는 것은 분명 경제 살리기와는 멀다.

다른 6개 광역경제권을 합한 것보다 '경제력'(자본)은 크지만 국토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도권에 규제완화까지 더해지면 인구집중에 따른 과밀화로 사회적 비용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국가경쟁력도 떨어진다. 이는 이미 정설이다. 지역

산·경남에서 기획한 광역경제권 개발을 지방정책의 근간으로 삼은 것은 아닐 것이다. 앞 정책과는 다른 판기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잘못된 현실인식이 보태진 정책이라고 믿고 싶다.

특별법으로 '대못질'

왜곡된 현실 인식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서 드러난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지방발전을 위해 예산 같은 '고기'를 직접 주기보다는 광역발전 계획 같은 '낙심대'를 쥐어 주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고기 낚을 만한 어장이 있길래도 하느냐"는 면박을 당했다.

지방자치 주무 장관이 이런 실정인데 다른 부처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호남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면 호남을 배제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큰소리다. 그것도 모자라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꿔 광역경제권 개발에 대못질을 하려는 참이다.

정부가 묻고 싶다. "지방을 살리긴 할 겁니까?" 하지만, 이렇게 되물을 것 같아 두렵다. "호랑이가 낚은 새끼 다 기릅니까?" 어떤 지역이 특정 지역을 위해 희생하는 식의 국가발전 전략은 더 이상 안 된다.

〈논설위원〉jnews@kwangju.co.kr

시 설

J프로젝트 심의 또 연기... 정부 의지 있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J프로젝트)에 대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또 무산됐다. 중앙도시계획위는 23일 J프로젝트 승인 신청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전남도의 핵심 현안인 J프로젝트에 먹구름이 드리운 것이다.

심의 연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월4일과 25일에 이어 벌써 세번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J프로젝트 지구내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한 현지의 견수령과 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이 끝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새만금지구와 비교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새만금지구 간척지 활용방안에 의결했다. 간척지의 30%는 농업용지로, 39%는 산업, 관광, 환경 등 비농업 용지로 확정했다. 참여정부가 수립한 토지이용계획에서 농업용지는 절반 이상 축소된 대신 비농업 분야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J프로젝트가 부처간 이견으로 간척

지 양도·양수와 활용방안 등에 혼신을 쏟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새만금개발계획이 정부의 지원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J프로젝트는 도시계획 심의마저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의 상당부분이 새만금과 중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이 아닐 수 없다.

J프로젝트는 새만금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오는 12월28일 새만금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연내 실시계획 신청과 내년 하반기 착공 등 전체 구상이 불투명해진 J프로젝트와는 확연히 비교된다.

정부는 J프로젝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J프로젝트가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서도 제외된 마당에 정부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간척지 양도·양수를 거부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지연시켜서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서민 '고통' 외면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

광주시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고 한다. 올 9월까지 집행액이 단 1건으로 전체의 0.57%에 그치고 있고 기금 35억원 대부분은 은행에서 '낙담'을 자고 있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기금이 이 정도라면 안타깝다.

광주시의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4.2%로 전국 평균 3.2%보다 높고 광역시 가운데 1위다. 저소득층이 많은 만큼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기금 집행 실적은 빈곤 탈출 및 자활 지원 기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1년부터 7년 동안 지원된 기금은 23건, 10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지원한 11건 중 7건이 2개의 특정단체에 몰렸고 개인대출은 한 건도 없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은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근저당 설정 등을

할 수 없어 신청조차 못하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침체되면 저소득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광주시의 실패율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연속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달에는 실패률 1위에 다시 올랐다. 서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이 근본 해결책이겠지만 생계대책이 막대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담보대출이 아닌 소액 신용대출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제상황은 심각하다. 금융경색에서 비롯된 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저소득층이 증가하면 사회불안 요소가 되고 결국 지역사회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민주주의 상징,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면서 관심권에서 다소 비껴나있는 듯한 느낌이지만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이번 미 대선의 최대 관심사는 워니 워니 해도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흑백 대결에서 '브래들리 효과'가 나타날 것 인지의 여부다. '브래들리 효과'는 1982년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선 민주당의 흑인 후보 브래들리가 투표일 직전까지 여론조사에서 크게 리드했으나 실제 투표에서는 패배했던 것에서 유래

브래들리 효과



표에서 여론조사와 상반된 결과가 나오면 백악관원이 좌절되고 만다. 워싱턴포스트는 '브래들리 효과'가 이번 대선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우선 백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점진적으로 탈(脫) 인종주의의 영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면서 겉

은 반증이다. 그러나 매개인 진영에서 거짓 답변하고 투표장에서는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는 투표일을 2주일 남겨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매개인 후보를 리드하고 있다. 격차가 다소 좁혀지긴 했지만 전 지역에서 우세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투

표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기 고



임 명 재

최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보도되는 내용을 보며 답답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 오랜 군사 정권하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대결을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민족 역사에 같이 남북의 발전과 협력의 노력을 위해 남북 단합이 있었고 그 뒤로 노무현 정부의 승계 노력으로 우리들의 북한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 남과 북이 함께 멋진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북한을 원수준으로 취급하려 한다. 언제까지 그러한 답답한 냉전 사고방식으로 사로 잡혀 국제경쟁에서 통과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려하는가? 북한과의 전쟁 때문에 그들을 용서받지 못할 대상이라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모두가 우리들의 적이며 심지어 베트남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도자 한 사람에게 의해 그 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며

만에 상면하여 그리움을 위로받았고 빼어난 금강산을 해로와 육로로 들어가 그 아름다움에 취해보며 북한도 우리의 땅이요, 그 곳에 있는 금강산에 자긍심을 가졌었다.

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십여 년간 쌓아온 남북 화해와 공존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 것을 요청한다.

대학 시험 후 학생들에게 답안지 돌려주길

지난 해 서울 몇몇 대학에서 시험 후 답안지 돌려주기 운동이 벌어졌다. 시험 성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해보고 대학으로부터 좀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광주·전남 지역 대학에서는 시험지, 답안지를 돌려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꼭대기다. 그렇다면 그 많은 학생들의 시험은 어떻게 채점한다는 말인가. 답안지를 돌려주는 그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이런 주장은 교수들 스스로 시험 답안지의 공정성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가 아닐까.

국가 공무원 시험 때도 시험지를 공개하고, 심지어 대입 수험능력시험은 정정 절차까지 마련해 놓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돌려주지도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대학 강의의 특성상 대형 강의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에게 답안지를 일일이 돌려주기 힘들다는게 교수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교수도 좀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학생들의 답안지를 검토하게 되고, 적은 경우지만 일부 교수들의 무성의한 강의와 준비 부족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박준용·목포시 옥암동**



홍 석 태

호남의 젖줄로 불리는 영산강은 국내 4대 강 중에서 오염도가 가장 심각하다. 특히 하구둑 건설 이후 20여 년 이상 누적된 퇴적오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퇴적물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썩은 곳을 도려내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듯이 퇴적물을 끌어내야 강물도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퇴적물이 쌓여있던 부분에 물이 채워진다면 그만큼 유량이 풍부해져 자정능력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있다. 영산강의 물이 맑아지고 배길이 복원되면 중간 침체된 영산강 문화도 새로운 부흥기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어 주변 기본 인프라가 확충된다면 다양한 친환경 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전남도가 마련한 영산강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수질 개선이다. 이후에 환경친화적인 옛모습 뱃길 복원과 영산강 주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완벽해 정화, 영산강과 조화되는 녹색 신도시

영산강을 살리는 길

과거나 지금이나 치산과 치수는 사람이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시원적인 정책이다. 다만, 현대의 치수는 과거처럼 자연에 대해 인위적인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 물길을 다스리되 홍수 때에는 자연스럽게 물을 담아 물난리를 막을 수 있는 저류지를 만드는 등 친환경적인 기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영산강을 살리는 길. 영산강을 살리게 되면 이 지역이 로하스(Lohas), 즉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 열풍에 부응하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전남도에서는 퇴적토 준설, 제방 보수 등을 통해 강을 살리고 주민편의를 높이는 가운데 그 부수적 효과로 영산강 뱃길을 복원하려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뱃길 복원을 위해 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수질 개선을 통해 강을 살리고, 강을 살리기 위해 준설을 비롯해 영산호 배수갑문 확장 등 치수사업을 펴는 것이다.

이렇게 강을 살려내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뱃길문화를 복원할 수 있다. 따라서 영산강 뱃길 복원은 강을 물류수단으로 보는 운하건설과는 근본적인 차이

출근길 무진로(어등대교) 안전거리 유지 운행하자

지난 5월30일 광주와 무안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무진로(어등대교)를 통행하는 차량이 하루 평균 8만대 이상 달하고 있다.

평균 5분이면 통과할 거리를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시 약 40분이 넘게 장시간 정체되는 불편을 운전자들이 호소하고 있다.

무진로(어등대교)는 상부권과 하부권의 직통로 개설 등으로 통행시간 단축과 영광역-함평-나주 방면으로 나가는 교통량 분산효과로 교통혼잡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보고 있다.

필자도 지난 20일 아침 출근길에 앞차량의 잇단 추돌사고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했으나 안전거리 유지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최근 무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출근길 추돌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게 되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대하여 당부하고자 한다.

차량의 뒤를 따르는 운전자는 앞 차량의 급제동에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하고, 조금천천히 여유로운 마음으로 운행했으면 한다. **▲오명욱·전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浩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편집부 2200-629	문화홍보부 2200-626	광고미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정예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다자 2200-536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신부 2200-690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